

# 고등사회과학원 설립 필요성과 그 운영방안 모색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사회학 전공  
dckim@skhu.ac.kr

- I. 머리말
- II.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 III. 고등사회과학원의 성격과 위상: 연구의 중심(Center)이자  
네트워크 기반(Platform)
- IV. 고등사회과학원의 주요 기능과 과제(시안)
- V. 맺음말

## I. 머리말

2016-2017 촛불 시민혁명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개발독재와 압축 성장의 폐해, 그리고 1997년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질서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표현된 것이다. 더구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성사,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사건을 맞아, 한국의 지식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동아시아 새로운 안보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임무를 안게 되었다.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가 대 개조, 지속적인 사회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출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 주도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 미국의 세기에 한국은 냉전 질서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쟁이라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세계의 여러 후발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성공에는 큰 그늘이 있다. 심각한 경제 양극화, 과도한 물질주의, 낮은 사회복지와 취약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그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은 그 동안 반세기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온 성장주의, 시장주의 사회경제 모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구 에너지 환경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국내외의 조건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 삶의 질과 인간 행복을 새로운 목표로 삼는 대안 체제의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원천기술 축적이 없이 모방과 조립가공으로 경제 활성화와 수출 신장을 기약할 수 없듯이,<sup>1)</sup> 19, 20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서구의 경험에

---

1)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축적의 시간』(지식노마드, 2017).

기초한 주류 사회과학 이론과 정책이 후발자본주의 국가이면서 여전히 세계체제 내에서 주변부적 특징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미래 전망 수립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난 세기 식민화, 분단, 전쟁과 폭력, 빈곤의 고통을 온 몸으로 겪어온 한국의 지식인들은 지구상의 패권국, 경제적 강자의 입장과 시각이 아닌 경제적 약자나 소수자, 그리고 선진국 진입의 출입구에서 서성이는 후발국, 주변국의 처지에서 이러한 변화를 대면하는 주체적 '위치 설정'과 그것에 기초한 이론적 보편화, 즉 지구적 보편적 과제와 한국 특수적 과제의 동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것을 위해 21세기 지금 시점에도 지적 학문적 탈식민, 자주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sup>2)</sup>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의 '국적 없는 질름발이'<sup>3)</sup> 상태를 극복하여 학문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지적 탈식민화를 성취하자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sup>4)</sup> 그리고 대체로는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 구축하자는 제안, 사회과학자들의 학문적 자세를 다잡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실천적 자세를 견지하자는 요청, 그리고 대학 개혁과 대학원 내실화를 추구하자는 등의 대안 등이 언제나 제기되었다.<sup>5)</sup>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상 변화된 것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인문학은 물론 사회과학 일반, 지식 자체의 생산과 유통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다. 양적인 측면에서 사회과학자들의 논문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이론의 질적인 발전, 한국 사회과학의 주체화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차세대 학자들의 생존은 더 힘들어졌다. 서점의 사회과학 코너는 거의 번역물이나 자기 개발서가 차지하였고, 대학생이나 시민들이 사회적 현안을 갖고서 논의하거나 토론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영향으로 책 읽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한국은 매우 반지성적인 사회가 되었다. '문(文)의 나라'인 한국이 '무(武)의 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

2) Mukherjee, Aditya, "Challenges to the Social Sciences in the 21st Century Some Perspectives from the South",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48, No.37(2013).  
 3) 임현진, 「21세기 한국 사회의 안과 밖: 세계체제에서 시민사회까지」(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 정승현, 「현대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담론」, 강정인 엮음, 『정치학의 정체성: 한국 정치학의 주체성을 위하여』(책세상, 2013).  
 5) 임혁백, 「위기의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과학의 위기」, 『아세아연구』 52(4)(2009), 110-129쪽.

초라한 수준이다.<sup>6)</sup>

정책 결정자들은 학문의 생산과 대학원 교육은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이념의 확립 등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학계나 학자들의 역량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 학계의 고질적 연고주의와 학문 분과 간의 칸막이, 외국 박사 과도한 선호, 남성중심주의 등의 문화가 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학 체제 혹은 제도가 이런 인프라의 구축에 어떤 제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대학 밖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미 한국의 많은 대학의 사회과학 관련 학과에서 박사과정<sup>7)</sup>이 개설되어 있고, 대학과 정부 출연 각종 정책연구소가 활동하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지원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왜 별개의 연구·교육기관인 고등사회과학원이 설립되어야 사회의 ‘근원’ 혹은 ‘바탕’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만약 이런 기관이 설립된다면 그것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된 사회과학의 탈식민화, 정체성 수립, 주체화의 요구를 학자 개인들의 각성과 의지에만 맡길 수도 없고, 정부의 사회과학 지원 예산의 증대와 지원 방식의 변경 등에 만족할 수도 없으며, 국내 대학원의 활성화와 국내 박사들의 우대 정책을 펴자고 촉구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러한 학자 개인의 의지, 정책 변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국의 대학, 특히 사회과학 대학원 박사과정의 반신불수 상태를 주목해야 하고, 이 제도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학문, 혹은 학자의 연구 활동은 주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개혁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특히 사회과학의 연구 활동, 지식의 생산이 공공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전면 개편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논의를 요하는 큰 과제다. 현재 한국의 대학 연구소, 혹은 여러 국책 연구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왔다<sup>8)</sup>

---

6) “일본의 한 신문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 어린이 희망 1순위는 학자, 박사였다(한국 남자 어린이는 운동선수). 흔히 한국은 문(文)의 나라, 일본은 무(武)의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출판, 신문시장 규모가 말해주듯 인구비율을 감안한다 해도 독서 인구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다.”(박훈, 「문의 나라 한국, 무의 나라 일본?」, 《경향신문》, 2018년 1월 17일자.)

전제 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 연구, 교육기관인 고등사회과학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 1. 대학의 위기, 공적 지식의 생산 필요성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학식은 물의 근원이나 나무의 뿌리와 같은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이 나라의 근원이나 뿌리를 복돋아주는 역할을 해야”하고 “학자의 직분은 나라의 전체를 계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하였다.<sup>8)</sup> 베블런은 “대학에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과학 및 학문의 탐구다. 이것이 대과학과 중등학교가 다른 점이다.”<sup>9)</sup>라면서 학문은 교육보다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데 그 근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은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와 교육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고등교육을 지배하게 되면서 대학운영에서 국가의 개입, 시장화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대체로 시장화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그래서 대학은 점차 시장 즉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배구조, 운영방식, 교육 내용 등에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sup>10)</sup>

사회학자 보아벤추라(Boaventura de Sausa Santos)가 말한 것처럼

---

7)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KDI의 경우 국가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대신 단기 대안 연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KDI,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부에 할 말 했는데……», 《한국경제》, 2016년 8월 21일자.) 정부는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이 평가를 통해서도 과연 이 기관들이 공적인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기관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도 주로 조직 경영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인상이 크다.

8) 유길준, 채훈 역주, 『서유견문』(명문당, 2002), 295쪽.

9) 소스타인 베블런, 『미국의 고등교육』(도서출판 길, 2014), 39쪽.

10) Chris Middleton, “Models of State and Market in the ‘Modernization’ of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1, No.4(2000), pp. 537-554.

신자유주의 이후 공적 지식의 생산자가 사라졌고, 교육기관인 대학의 헤게모니 위기, 정당성의 위기, 그리고 제도적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sup>11)</sup>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질서, 특히 학문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는 시장의 요구에 맞게 학문과 교육활동을 전면 개편하도록 압박했기 때문에, 대학과 여러 연구기관은 모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2)</sup> 그 결과 당장의 효과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장기 비전을 고민하는 인문학은 설 자리를 잃었으며,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지식인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재정 지출 등 모든 측면에서 고등교육이 국가보다는 시장, 즉 가족과 개인의 지출에 의존해온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고등교육의 시장화는 대학을 ‘인적자원’의 개발 기지, 취업률 전쟁터로 몰아갔고,<sup>13)</sup> 학문 활동 특히 기초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더욱 황폐화하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소수의 국립대학들도 최근 20년 동안은 거의 사립대학과 다를 바 없이 대학운영의 기업화, 기금 확보, 경쟁력 없는 학과의 축소 등의 시장화 정책을 가동하였다.

사회과학에서 학문의 공공성과 실천성, 그리고 주체성의 개념 자체가 제대로 선 적이 없었던 한국에서 대학과 학문 일반, 특히 ‘사회과학’의 위기는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 즉 사회과학 기초 이론 연구,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그리고 차세대 학자의 양성 등 모든 측면에서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한국 사회과학은 이론 수준이나 학자의 재생산 측면에서도 여전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쟁주의가 대학사회를 지배하면서 안그래

11) 그가 말한 헤게모니의 위기란 교육 혹은 지식생산의 기지로서 대학이 그 동안 누려왔던 헤게모니가 거의 무너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정당성의 위기란 사회적 합의의 기구, 혹은 민주화의 정신에 기초한 보편적 교육기회의 제공 기관으로서 대학이 갖는 위신이 흔들린 것을 의미하며, 제도적 위기란 신자유주의 경쟁만능의 시대에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독자성 혹은 가치가 과연 지탱될 수 있는냐의 문제였다. (Boabertura de Sausa Santos, “The University in the 21th century: Toward the democratic and Emancipatory University Reform”, Michael Apple et al eds, *Routled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10).

12) 기존의 대학과 전혀 다른 개념의 미네르바 스쿨, 아쇼카 대학 등 캠퍼스 없는 대학, 사회 혁신가 양성,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새 대학의 등장도 사회혁신 ‘기업가’ 양성을 모델로 한다.

13) 조상식,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과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정책」, 한국대학학회 편,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소명출판, 2017).

도 취약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과 교육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 2. 한국 사회과학의 생산 기반의 결여와 그 문제점

2011년 봄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를 발간했다.<sup>14)</sup> 그런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관계자 및 학자들은 이 보고서 편집, 집필 과정에 “한국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학자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실토한다.<sup>15)</sup>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 작업에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빠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구비율 미국 유학자 수 최고로 많고 영어로 집필된 학술 논문수도 최근 2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나라 한국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세계 사회과학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한국 학자가 빠진 것은 우연한 일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에 비해 사실상 국제 학계에 소개된 사회과학 서적이나 논문 중 한국 학자들의 기여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가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다. 즉 한국이 외국 학문의 흡수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지만,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 지금 지구의 인류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한국 연구자가 거의 없었던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문적인 독창성과 수준을 가진 사회과학자 군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근대이후 유럽과 미국의 대학과 사회과학은 시작부터 자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 대변하는 역할을 했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주변부에서 공급받아 이들 피식민지 지역에게 유럽중심주의적인 사고, 즉 근대 부르주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기관의 역할을 했다. 물론 그것은 인류의 일반적 처지와 관련된, 지구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는 전제 위에서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이다.<sup>16)</sup> 서구의 대학들과 연구소들은 20세기 인류가 부딪친 여러 가지

14) Unesco,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World Social Science Report: Knowledge Divides*(Paris: Unesco, 2010).

1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NESCO World Social Science Report 연구분석」, 2011, 3쪽.

16) Raewyn Connell, “Periphery and Metropole in the History of Sociology”, *Sociologisk Forskning*, Vol.47, No.1(2010), pp. 72-86.

문제를 조사 연구해 왔지만, 연구 주제나 연구기금, 연구자들은 주로 서구 패권 국가의 이해 관심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와 냉전이 시작될 무렵 세계 학문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하였고, 미국은 세계 사회과학의 생산과 유통망을 거의 장악하였으며,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문화적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강화하였다. 세계 자본주의의 지휘부가 된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은 세계 정치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과 정책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다. 그래서 반공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교리로 전 세계 각국의 미래 엘리트들을 훈련시켜 그러한 설명 틀이 전 세계로 유포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나라의 엘리트들을 초빙하고, 자료와 통계를 종합하여 최고의 지식을 생산한 다음, 그 지식으로 세계를 지배했다.<sup>17)</sup>

근대 제국주의 이후 군사 정치적 패권질서는 동시에 지식과 학문의 패권질서를 만들어 냈다. 대체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은 지구적인 패권을 가진 국가에서 생산하고 식민지나 주변부에서는 그 지식을 소비하는 지식의 국제 분업, 지적 위계질서가 만들어졌다. 일제 식민지와 분단 냉전을 겪은 한국 지식사회 특히 사회과학계의 경우 식민성과 주변부성이 두드러져 왔다.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과거에는 냉전, 근대화 이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 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론이 일방적으로 지배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성과 비판도 많았지만, 거의 교정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의 국가운영과 경제발전, 안보 문제와 가장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정치학, 국제정치학, 경제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심하다. 사회과학 분야 대학원 교재의 경우 주로 미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사용된다.<sup>18)</sup>

교수, 학자들의 구성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약간 지난 통계이기는 하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 사회과학계열(경제, 경영, 사회, 인류, 심리, 사회복지, 정의, 행정, 교육, 언론, 지리학) 교수의 박사학위 취득국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633명 가운데 국내박사는 30명

17) 시카고 학파의 미국 내 학문 패권 차지와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미친 역할에 대해서는 이브 드잘레이 외, 김성현 역, 『궁정전투의 국제화: 국가권력을 둘러싼 엘리트들의 경쟁과 지식 네트워크』(그린비, 2007).

18) 장시복, 「미국 주류경제학과 한국 경제학의 위기」, 학술단체협의회 편,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한올아카데미, 2003), 170-173쪽.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 6.3%(12명), 서울대 5.1%(12명), 연세대 2.8%(6명)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국내 박사들은 교수임용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를 전공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사회학이 총 38명 중 8명(21%)으로 국내박사 비율이 가장 높다. 교육학이 53명 중 6명(11%)이지만 다른 전공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학과는 총 213명 중 2명(0.9%), 경제학과는 총 104명 중 3명(2.9%)에 불과하다. 정치외교학과는 총 61명 중 2명(3.3%), 행정학과는 총 55명 중 2명(3.6%)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외의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문학의 경우도 국문학, 국사학 등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하면 이러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sup>19)</sup> 경제학의 경우 박사학위자의 비중, 학술지 인용 빈도 등에서 미국의 주류 경제학이 압도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94%가 미국 경제학 박사로 채워졌다.<sup>20)</sup> 서울대 경제학과의 경우 34명의 교수 중 33명, 정치외교학부 교수 24명 전원이 외국박사다. 한국 경제학자 1천 599명 중 해외박사는 1천 162명이고 그 중 840명이 미국 박사다.<sup>21)</sup>

영어로 발표된 사회과학 논문도 크게 늘어나기는 했으나 한국 필자들은 주로 지역연구, 한국 사례 연구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정부수립, 박정희 전두환 개발주의 시대까지 한국이 서구 지식의 수입국가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정도에는 이제 정부차원이나 학계에서도 독자적 사회과학 수립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계획이 마련되고 실천이 되었어야 했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 중에서 사회과학 이론과 정책적 대안을 여전히 외국에 절대 의존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한국이 경제력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으나 지적으로는 한국이 처한 고유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이론이나 방법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나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시야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sup>22)</sup>

19) 「서울·연·고대, 사회과학 교수 633명 중 국내박사는 30명」, 《교수신문》, 2010년 11월 2일자.

20) 2008년 당시의 조사이므로 현재는 다를 수 있다. 《교수신문》, 2008년 9월 25일자.

21) 「경제 6천747명 最多…… 정치·사회 1천534명 그쳐」, 《교수신문》, 2016년 4월 25일자.

22) 김민기 숭실대 교수(언론홍보)는 “해외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일부가 문제의식을 가다듬

한 때 제국 경영을 했던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은 한국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훈련된 인문사회과학 학자들을 교수 요원으로 기용한다<sup>23)</sup>. 중국은 19세기까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주변부, 식민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 굴기(屈起)의 과정을 통해 열심히 미국 유럽 학습을 하다가 최근에는 중화민족주의, 아시아주의를 제창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아예 미국 주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모델을 보편화하려 한다. 한국의 지식인들과 학자들은 식민주의와 냉전,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그리고 자본주의의 세계체제의 여러 복합적인 조건들이 어떻게 한반도와 한국 사회에 내재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다.

지식은 언제나 정치경제적 지배와 연결되어 있다. 강정인은 학문에서의 서구중심주의가 비서구인들에게 끼치는 일반적 피해는 서구중심주의가 궁극적으로 비서구인들로 하여금 서구문명의 우월성과 보편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함으로써 서구의 문화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24)</sup>고 비판했다. 서구 중심의 학문과 출판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인도의 고아재단 대표 클로드 알바레스는 "(학문)수입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세계적인 (지식)생산국이 되지 못하고 학문과 고등교육 부문이 빌려온 지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외국의 사회과학 모형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sup>25)</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50년대부터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반공과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식인과 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는데,<sup>26)</sup> 초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 생산체제는 지난 70년 동안

---

는 노력보다 연구방법론을 수입하는 활동에 치중해 해외에서도 유의미한 사회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국내에서도 한국사회의 문제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과학 해외박사 7천명 "국제화인가? 종속인가?"』, 《교수신문》, 2016년 4월 25일자 (<http://www.kyosu.net>).

23) 일본 지식인들은 19세기 말의 '동양' 개념, 1930년대 만주 침략 태평양 전쟁 시의 '대동아' 개념처럼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위해 아시아에서 벗어났다가, 아시아의 주도세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이동을 겪었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미국과 사실상 한 몸이라고 인식한다.

24)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아카넷, 2004).

25) 서구학문 수입 계속 땀 지식 노예화, 《경향신문》, 2007년 6월 19일자.

26) 정일준,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만들기': 1950, 60년대 미공보원의 조직

이제 한국인들 자신에 의해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치학, 특히 국제정치학의 일방적 미국 주류 사회과학 편향은 학문적 종속을 넘어서서 현실 정치적, 외교적 종속을 유지 강화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국 한국의 국가 이익보다 미국 주류세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sup>27)</sup> 미국 경제학은 자본주의 한국의 지배질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김종영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교수가 된 학자들이 지배체제의 기둥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sup>28)</sup> 한국 경제학자들의 시장주의 경향은 이 원산지인 미국보다도 훨씬 더 교조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교조성은 언제나 지배 질서의 유지와 연결되어 있다.

수요와 공급에 바탕을 둔 시장주의적 사고방식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일종의 '체질과 같은 것이다. 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은 언제나 든든한 이론적 배경을 사회간접자본처럼 갖고 있다.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의 경제학자 다수는 미국에서 공부했다. 특히, 지금 중견학자들은 미국 경제학계가 가장 보수적인 기간에 수학하였다. …… 그래서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시장주의적 정책 처방은 오히려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지난 10년간, 시장 중심적 사고방식이 경제정책을 지배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세계 최고의 노인 및 청년자살률,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한국사회가 '자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독점화된 대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부여된 경쟁의 부담으로 시장이 효율화되기보다 시장 자체가 서서히 파괴되는 장면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실패한 정책을 '시장 또는 규제 완화라는 안전판 뒤에서 또다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는 표현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다.<sup>29)</sup>

이것은 성리학 교조주의가 지식사회를 황폐화하면서 양반 지배층의 지배를 지탱했던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으며, 어떤 점에서 그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

사회과학의 후진성과 종속성은 지식시장 일반 특히 출판 시장의 종속성을 낳고, 한국 출판 생태계를 황폐화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

과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편,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한울아카데미, 2003).

27) 정영태, 「한국 정치학의 미국 편향성과 한국 정치」, 학술단체협의회 편, 위의 책.

28) 김종영,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돌베개, 2014).

29) 한홍렬, 「변방이 더 교조적」 떠올리게 한 한국 경제학자들」, 《한겨레신문》, 2018년 2월 14일자.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해서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지구적 의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출판사들도 번역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나 정치권도 한국사회의 해법을 찾을 때 언제나 해외 ‘석학’에 의존하고, 막대한 강연료를 준비해서 그들을 초청해 왔다.

### 3. 대학원 강화,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한계

한 나라의 인문사회과학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되 당대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인 고민을 집약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학자 혹은 전문연구자들이다. 학자의 양성은 곧 지식의 생산 과정이다. 학문 생산, 학자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 혹은 정치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일에 속한다. 학자는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 다음, 외국어를 학습하여 선진 학문을 두루 섭렵하되,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념을 정립하며 이론을 수립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근대 학문이 도입되고 근대 국가가 수립된 이후 대학이 졸업생을 배출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 대학의 사회과학 학과, 특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기초 사회과학에서 자체의 학자를 생산할 시스템, 즉 학부와 명백히 분리된 박사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968년부터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대학을 표방하였고, 지난 20여년간 교육부도 여러 지원 사업을 연구중심대학 추진과 연계하는 등 많은 정책을 도입했으나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대학의 사회과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학부 대학’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대학 학부는 엄청나게 팽창했고, 교수요원도 부족해졌으나 대학원 운영을 명시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으며, 대학 연구소가 자생력을 갖춘 곳은 드물다. 지금 국내 상위권 대학의 사회과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는 장차 직업적 연구자로서 삶을 개척하려는 청년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sup>30)</sup> 즉 사회과학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직업적 연구자의 길을

30) “한국의 명문대 대학원들은 석사조교만 배출한다”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서울대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에게 무엇인가?」, 《대학신문》, 2013년 5월 26

가려는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유학의 길을 택했고, 유학은 곧 미국 유학을 의미했다.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은 인문 사회계열 ‘학술 진흥’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sup>31)</sup> 그것은 대학을 교육 중심, 연구 중심 대학으로 구분하고, 지원을 받는 대학을 대학원 대학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었다.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학술 진흥’ 정책이 시도된 셈이다. Brain Korea(BK) 21 정책 (BK 21 플러스) 정책은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고, 그것은 지원을 받게 된 대학의 연구 활동이나 대학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교수 업적의 평가, 국내 대학원생 지원 정책, 대학연구소 활성화 정책 등 다소 구분되는 목표나 정책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대학 간의 서열화와 불평등 심화, ‘교육노동시장 유연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sup>32)</sup> 즉 겉으로는 대학에서의 연구 활성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강조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대학의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었다는 비판도 받았다<sup>33)</sup>.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 정책이 대학교육 정책과 명확히 분리된 학문, 학술 진흥 정책의 성격을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sup>34)</sup>

이후 인문한국(HK),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사업(SSK) 사업 등이 연구 지원, 인문사회과학 대학원 육성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생, 즉 ‘학문후속세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박사과정생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이 학문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학부생들이 국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도록 만들었는지, 박사 학위 후 전업 연구자로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는지는 의문이다. 즉 이런 지원 사업이 사회과학도들로 하여금 유학보다는 국내 대학원

---

일자.

31)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계열 학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1998. 7.

32) 김세균,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 『사회비평 21』(1999), 140-150쪽.

33) 원용진, 「2단계 BK 21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문화과학』 46호(2006).

34) 학술정책과 교육정책은 연결되어는 있으나 사실상 별개의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연계도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세훈, 「학술정책과 교육: 연구체제의 변동」, 『한국사회학』 제36집 2호(2002).

을 선택할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국내 박사들이 교수 시장 진입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대학의 자기 학부출신 선발 제한, 여성 교수 T.O 확대 등의 정책이 교수시장의 동종교배를 막은 약간의 교정제 역할은 했다. 그러나 실제 영어 논문 편수로 업적을 평가하고, 영어강의로 교수 채용 면접을 보는 채용관행 속에서 국내 박사 학위자들이 외국 박사들과 경쟁해서 자리를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이들 각종 연구지원 사업에서 중·대형 연구과제가 많다보니 박사 연구자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애초의 연구 관심이나 전공과는 잘 맞지 않는 과제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과제에 오랜 동안 참가하고 관련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애초의 연구관심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수 연구 인력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게 되면 상위권 대학의 사회과학 학과에서는 교수들과 공동연구 그리고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는 박사과정생을 찾기 어려워진다. 즉 한국의 상위권 대학이 박사 양성을 미국 대학에 위탁하는 전형적인 학문 종속국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 간의 연구, 학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연구 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 팀을 급조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BK 21 혹은 중·대형 연구 과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서울의 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연구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학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내의 관련 연구자들을 모아야 하고, 이들 간의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사립대학 중심의 한국 대학 체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교수 집단이 학연주의에 지배되고 있으며, 대학 간 교수의 이동이 드물고, 대학 간 연구 교류도 드문 한국의 조건에서 아무리 중요한 연구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연구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교육부의 여러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과 박사 연구자들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논문 편수 채우기, 새 학술지 창간 등을 통한 양적인 성과 축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sup>35)</sup>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 업적의 평가 기준은 주로 공학과 자연과학의 모델에 기초해 있고,

---

35) 위의 논문.

논문위주의 평가여서 논문의 질, 저술 등은 무시되었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중적 저술활동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지원 사업으로 학자들과 박사연구자들의 논문 편수는 많아졌으나 새로운 접근방식과 개념을 제시한 연구가 기대만큼 쏟아져 나온 것 같지는 않다.<sup>36)</sup> 특히 이 사업이 연구중심대학 혹은 대학원 대학, 애초에 의도한 것처럼 대학 연구소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는 거의 성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비판의 직면 하에 교육부는 2014년 이후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평가지표 개선안에서 저술의 비중을 높였고, ‘학술저서’의 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 평가에서는 학문 선도성과 함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지표에 포함하기도 했다.<sup>37)</sup> 물론 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 평가 지표의 변경 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지속되어 온 연구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이 무엇인지, 현행 대학의 연구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위권 대학이 대학원 대학, 혹은 연구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 정원을 포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대 학부의 정원축소를 전제로 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변신할 것을 압박하였으나 서울대는 약간의 정원 감축으로 응답하였다. 즉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은 상위권 주요 대학이 학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학의 사회적 위세, 즉 대학서열은 학부 입학생의 성적에 좌우되기 때문에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에 소극적이다. 결국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은 대학원의 내실화,

---

36) 김성수, 「한국 대학원 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BK 21, WCU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2호(2013), 53-79쪽.

37) 「공학 ‘논문 편수’ 삭제하고 인문사회 ‘저서’ 비중 강화」, 《교수신문》, 2014년 9월 22일자. 사회과학 분야 코디네이터를 맡은 하연섭 교수가 “한국의 물리학과 미국의 물리학은 다를 수가 없지만 한국의 사회과학과 미국의 사회과학은 같을 수가 없다. SSCI 논문을 강조하다 보니 젊은 교수들이 한국 문제에는 관심 없다. 미국 한 주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SSCI를 강조한 것은 세계적 연구방법으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지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혹은 대학원 대학, 연구중심 대학으로 변신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대학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사람들도 대학원의 질이 아니라 학부 입학생의 성적이 국제 경쟁력이라 본다.<sup>38)</sup>

인문학과 달리 사회과학 연구는 정치 경제적 조건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연구재단 등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교수들이 내심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도 생각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권력기관에게 불편한 과제 등은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연구자들도 그런 주제를 일부러 피해서 동료인 심사위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연구 주제를 선택하기 쉽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주할 조건이 되는 큰 대학에 전공 교수나 연구자가 없으면 그런 주제는 연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즉 중·대형 연구 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의 교수진의 구성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주제 간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가 당면한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 재벌개혁과 경제혁신,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 환경과 에너지 위기 등 극히 중요한 사회경제 정치적 과제에 대한 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대학 연구단위는 찾기 어렵고,<sup>39)</sup> 이러한 연구 주제로 몇 대학 컨소시움을 구성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필요한 연구 주제라고 하더라도, 기대되는 연구 성과는 나오기 어렵게 된다.

물론 학문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의해서만 육성되는 것은 아니고, 학회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출판 시장이 마련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며 도서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이 편찬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학술잡지가 발간되어야 하며, 지속적 세미나가 개최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높은 수준의 이론서, 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가 발간되어야 한다.<sup>40)</sup> 이것은 정책 이전에 시민사회의 역량과 관련된

38)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는 어떤 자료로 측정해도 세계 대학 순위에서 30-50위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적 수준의 종합대학인 서울대를 하향 평준화시켜서는 안 된다”로 대학 평준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25일자.

39) 고대 아세아 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최장집 교수는 아세아 문제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미국의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50년대의 『한국공산주의연구』 5권이며, 민주화 이후 오히려 장기연구는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최장집, 「한국 사회과학 발전에 관한 하나의 숙고: 학문 레짐의 자율성과 학문자유를 향하여」, 『황해문화』(2017 봄).

것이다. 특히 우수 인력이 학문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학자의 생존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학자와 학생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면서 학문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연, 정치적 입장의 차이, 위계서열, 남녀 차별에 의해 교수 층원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학문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과학계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타하기 전에 시민으로서 자신의 직업세계의 생태계도 아직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한국 사회과학의 주체성과 독자성 결여는 대학 학과와 학문 분야 간의 높은 장벽과 학자들 간의 소통 부재, 학부 대학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대학 내에서의 연구 기능의 주변화, 국내 박사 홀대로 인한 사회과학 박사과정의 공동화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지원 액수는 크게 늘어나도 사회과학의 독자적 재생산 기반 구축,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사회과학 연구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 학부 대학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상위권 대학의 학과 중심 체제, 연구중심 대학 수립의 실패가 가장 심각한 장벽이자 정책적 결과라 보기 때문에, 대학 개혁, 대학원 대학의 실질화가 필요하나 그 외의 대안으로서 고등사회과학원의 설립도 필요하다.

### III. 고등사회과학원의 성격과 위상: 연구의 중심(Center) 이자 네트워크 기반(Platform)

한국의 고등사회과학원은 국가 연구기구이자 대학원 대학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책 연구소와 달리 별도의 국가 학문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의 연구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1)</sup> 국가 학문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별도로 설립되는 것이 좋고, 국가의 장단기 학술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40) 이것은 중국의 석학 페이사오통(費孝通)이 제기한 '오장육부론'에서 따온 것이다. 이동철, 「한국의 새로운 학과 성립의 요건」(미발표 초고)에서 재인용.

41) 앞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보고서에서 국가학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다. 강내희 교수도 그 필요성을 역설한다. 강내희, 「국가 학문위원회가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2017년 5월 21일자.

과거 영국의 페이비안 협회(Fabian Society)는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모태가 되었고, 프랑스의 자유·공화 부르주아는 파리정치학 자유대학(Ecole libre des sciences politiques)이라는 엘리트 교육기관을 만들었다.<sup>42)</sup> 시민사회 혹은 지식인 운동이 모태가 되어 이후 국가 교육기관이 된 경우다. 독일에서도 1948년 2월 26일, 카이저빌 헬름학회 소속의 29개 연구소를 중심으로 막스-프랑크 협회(Max-Planck-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en e. V)가 조직되어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0개 연구소가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sup>43)</sup> 이 연구소에는 약 13,000명의 영구 고용 직원과 4,700명의 과학자와 11,000명의 포스닥과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방문자가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기관은 각국의 정부가 출연한 기금과 지원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초 연구 그리고 필요한 학자와 학생의 육성을 임무로 한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의 대학원과 연구소는 주로 민간, 즉 대기업의 지원과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는 포드재단,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등 각종 민간 연구소가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중,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기에 미국 정부는 여러 대학의 연구소에 큰 예산을 투입하여 공산주의 및 제3세계 연구를 지원했다. 즉 지금까지 어떤 선진 국가도 기초 연구, 특히 인문사회과학 기초 연구를 민간 기업에 의존하지는 않았다. 물론 국가가 이런 활동을 하기까지는 학회, 협회 등 시민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도 일제 식민지 초기 민립 대학 운동이 활발했고, 해방 후에도 공적 관심에 기초한 대학 건설 운동이 활발했지만 교육 아닌 학문연구, 학자양성을 위한 국가나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국가주의 전통이 매우 강한 한국이나 일본에서 기업 혹은 민간인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장기 발전과 관련된 연구 정책사업, 공공성을 가진 연구 사업에 지원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프랑스가 혁명 이후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을 만들고, 국립학술

42) 조홍식,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의 역사사회학: 시앙스포(Sciences Po)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2권 3호(2014).

43) <https://www.mpg.de/183298/history>.

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를 설립하고, 이후 콜라주 드 프랑스(Collage de France), 그랑제콜 중 사회과학을 특화한 사회과학고등연구원(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등 다양한 성격의 연구, 교육단위를 만든 것처럼, 개발주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개혁의 전망 수립이 시급하고, 더구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새로운 질서를 구상해야 하는 지금의 전환기에 한국도 이런 기존의 인문사회과학 관련 학과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교육 기관인 고등사회과학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에서, 그리고 국가주의 전통을 가진 대만, 프랑스 등에 기존의 대학과는 별개의 연구 교육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당의 직속기관으로서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인문사회과학연구의 최고의 학술기관이자 종합연구센터로 자리 잡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sup>44)</sup>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무원 소속이라고는 하나 국가의 공식 이념, 권력자의 의중과 배치되는 독자적인 연구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하는 사회과학원의 모델이 되기 어렵다.<sup>45)</sup> 프랑스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역시 산하 12개 이상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연구단위 편제로 되어 있는 조직인데, 기존의 국립대학교 이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이중 적을 가진 교수들이 연구 작업에 참여하고 원장 선출 등 의사결정에도 개입한다.<sup>46)</sup> 그래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 고등교육과 사회과학원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등사회과학원은 개별 정부 부처와는 분리된 기관이어야 하며, 국가 학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그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의 출연금과 운영비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44) [https://en.wikipedia.org/wiki/Chinese\\_Academy\\_of\\_Social\\_Sciences](https://en.wikipedia.org/wiki/Chinese_Academy_of_Social_Sciences).

45)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무원 직속의 국립연구기관이다. 현재 6개 부서의 37개 연구소를 두고 있다. 중앙 정부의 중요 자문기구이며 전국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중국사회과학원>)

46) 프랑스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는 현재 830명의 연구자와 3,00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있다. 원래 19세기 설립된 고등연구실천원(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의 사회과학 파트로 있었으며, 유명한 아날 학파의 근거지였으나, 1975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20년대부터 2차 대전 후까지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School\\_for\\_Advanced\\_Studies\\_in\\_the\\_Social\\_Sciences](https://en.wikipedia.org/wiki/School_for_Advanced_Studies_in_the_Social_Sciences))

받을 경우 재정이 안정적이고, 정부 부처의 지원, 국책연구소, 국립대학과의 네트워크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정권이 교체되면 장기 정책연구가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 입김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주제 설정과 연구 방향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배구조, 특히 이사나 원장의 선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처럼 소속 교수들이 전원 투표를 통해 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학계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임명을 하거나, 중견이상의 학자들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자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해서 국가 학문위원회에서 임명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등사회과학원은 국가의 장기 정책연구, 박사 양성의 '중심'(center) 기관의 역할을 하되, 기존 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혹은 기반(platform)의 이중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존의 국책 연구소는 당장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데, 정권의 입김과 해당 부처의 요구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고등사회과학원은 국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 중 각 부처의 당장의 요구와는 거리를 둔 장기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맺어주는 허브, 기반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부처의 이해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한국개발연구원과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 과제, 외교부, 통일부의 산하 연구기관들의 장기 국가정책 관련 연구는 서로 간 조정, 연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 기관과 공·사립 대학의 관련 연구소들 간의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도 할 기관이 필요한데, 고등사회과학원이 그런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국립대학과 국책 연구원과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서 강의, 자료와 도서관 이용,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직접적인 교류도 시행할 필요도 있다.

국가와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큰 중요 의제, 그리고 여러 복합적 원인이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학제 간의 협동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원래 특정 분야 전공자의 수가 매우 적고 그나마도 대학이나 연구소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자들이 소속 기관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과제에 결합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은 서울의 주요대학의 경우도 학과 전임교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학부 교육 중심의 현 한국의 대학들이나 학과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려는 교수들에게 별도의 배려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대학 연구소가 중·대형 과제 지원을 받더라도 정작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진 구성은 어렵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필요한 연구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네트워킹 기관이 필요하다.

고등 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들과 교육 단위인 대학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래서 조직 편제는 학과 단위가 아니라 산하 연구소 혹은 연구팀 단위여야 하고, 이 연구단위는 유연하게 구성,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교수, 혹은 연구원은 1/2은 자체 충원, 1/2은 다른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파견 교수(최소 2년 이상)로 채우고, 일부 외국인 학자를 초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체 교수는 여러 연구소 혹은 연구 과제의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이들이 주도해서 주요 연구단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단위를 축으로 국립, 혹은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들을 하나의 연구 팀으로 묶거나 장단기 파견 형태로 받아서 연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자들이 고등사회과학원의 연구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대학, 연구기관에서 별도의 배려를 해야 하고, 당장 사립대학의 소속 교수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대학,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유연하게 결합하거나 초빙연구원, 파견 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속 교수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구단위에 소속되어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박사과정생과 박사후 과정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 대학의 연구와 교육 체제, 그리고 여러 국책연구소들의 활동 관행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에서 고등사회과학원이 새롭게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경우처럼 국가나 사회의 중요 의제를 연구 교육하는 국가의 중추 연구기관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기존의 대학 연구소, 각 정부 기관에 소속된 국책 연구소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위권 대학의 여러 사회과학 학과들은 학부정원을 없애거나 축소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신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고, 이들 대학의 산하 연구소는 그것의 연륜과 업적에 따라 특정 주제를 전문 연구하는 기관으로 변신해야 한다. 고등사회과학원은 기존의 국립 대학 사회과학 학과나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극과 압박을 주되, 대학 단위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 교육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IV. 고등사회과학원의 주요 기능과 과제(시안)

고등사회과학원의 기능은 중요 국가 사회적 의제에 대한 독자적인 장기 정책 연구와 연구 네트워크, 그리고 박사과정 혹은 박사 후 과정 운영으로 집약될 것이다. 연구 활동은 주로 이론·문화연구, 장기 국가 정책, 그리고 지역연구로 세분될 수 있으며, 대학원은 박사과정 운영과 박사후 과정으로 구분될 것이다. 연구소들은 현재의 기존 대학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학과의 장벽을 없애고,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질적 양적 자료를 집적하고, 그것을 모든 학자나 관련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고등사회과학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주로 하되, 교육 기능 즉 박사과정 운영과 박사후 연구과정 지도를 부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국가 사회 비전 수립을 위한 이론과 정책 연구

현재 한국은 국가나 사회가 부딪친 거시 장기적 의제를 정치권력은 물론 기업 등 이익집단의 요구로부터 독립하되, 탈서구중심주의 문제의식에 기초한 사회과학 연구를 필요로 한다.<sup>47)</sup> 고등사회과학원은 한국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요 이론 정책적 과제들을 기초 조사와 그것에 근거한 정책 대안 수립 작업을 수행하되, 삶의 현장과 밀착한 것이어야 한다.<sup>48)</sup> 신자유주의 질서가 본격화된 이후 대학이 이러한

---

47) Aditya Mukherjee, op. cit, p. 33.

공공적 지식의 생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 점이 크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양극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파괴적 결과를 심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에 대한 성찰에 기초하여 대안적 사회 모델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sup>49)</sup> 고등사회과학원의 연구 활동은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수립에서 역사성, 주체성, 장기비전, 현실 적합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정권이 '성장'과 '발전'의 담론과 정책을 생산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소와 몇 대학의 연구소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과 여러 국책연구소에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경제 모델, 소득과 재산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균형발전 등의 도전적 과제에 대해 적절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sup>50)</sup>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정치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지만, 성장주의를 앞세워 온 기존의 사회경제 모델을 전면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외국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과 시각에서 연구하고 종합해온 국내 연구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sup>51)</sup>

특히 한국은 1990년대 초 민주화와 사회주의 붕괴,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 극히 중요한 변화의 국면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혁신의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아칠 때,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집단이 없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사전에 경고한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는 거의 하나도 없었다. 장기 인구정책 인력수급 정책을 마련을 하지 않아, 저출산 시대에 확고히 진입한 이후인 1995년에 가서야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종합 연구나 체계적인 처방을 내리는 연구단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등사회과학원은 이러한 국가적 현안

48) *ibid.*, p. 33.

49) Boaventura, p. 278.

50)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역할을 맡은 성경룡은 한국은 지금 인구소멸 등 7대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지식체계와 지적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외국 이론을 단순하게 적용하거나 답습하고 모방하는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한 문제제기라 볼 수 있다. (성경룡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2018년 3월 18일자.)

51) 박해남, 「한국사회연구원이 필요하다」, 《교수신문》, 2017년 7월 12일자.

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고등사회과학원의 연구단위는 문화·이론연구, 사회경제 정책연구, 지역연구 3개 분야로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화·이론 관련 연구단위는 독자적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론 구축을 목표로 하고, 사회경제 정책연구 단위는 국가나 사회개혁의 거시 장기적인 정책 수립관련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지역연구는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의 정치경제를 분석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론과 정책, 정책과 지역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연구는 한국의 역사, 주제적 조건에 기초를 두되, 동아시아나 외국의 정부 및 민간 연구소와 활발히 교류하여 인류 보편의 과제 해결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연구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 이 지역 각 나라가 부딪친 사회경제적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불로냐 프로젝트가 대학과 산업의 결합, 즉 시장의 수요에 맞는 대학개혁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유럽 대학의 문화적 상호이해와 학술지원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국제교류도 강조했다.<sup>52)</sup>

한국에는 많은 국책연구소가 있지만 분과 학문의 벽을 넘어서 중국, 미국, 유럽 등 지역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별로 없다. 한미관계, 대북관계 정책 수립에서 국가 이익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취약하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미군기지 문제, 동남아 경제, 한중관계, 북한 자원 개발 문제 등 현재와 미래 국가 외교정책에 극히 중요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중심 단위가 거의 없어서 기업과 정부는 국책 연구소 및 몇 명의 전문가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연구 센터가 있으면, 기업이나 정부는 해외 진출과 투자, 각종 현지 자료나 정보 취득,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중요 지역의 정치·사회상황, 법 제도 등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정부 각 부처가 부딪치는 현안 연구는 기존의 여러 국책연구기관, 국회 내 연구기관, 그리고 각 정당의 연구소 등이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

52) 정영근, 「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2016), 117쪽.

보다 추상적인 이론 연구나 역사연구는 대학 연구소가 수행해야 한다. 대학 연구기금이 풍부하다면 기존의 대학 연구소가 정책 싱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등사회과학원 연구진에는 사회과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중, 인문학 전공자도 연구진으로 편입하여 지역연구, 이론연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후, 환경, 에너지, 도시, 생태, 건강과 의료, 산업재해, 지역연구 등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연구자들도 적극 결합하여 학제의 벽을 넘어서는 연구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고등사회과학원이 문학 역사, 철학 등 모든 인문학을 포괄하는 고등인문사회과학원의 위상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정책연구 중심의 목표가 흐려질 수 있고, 인문사회과학 전체를 포괄할 경우, 국가 연구기관이 과연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인문학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의 영역이므로 국가기관이 그것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론, 문화 영역의 인문학 연구는 대학 연구소가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 운영

고등사회과학원은 주로 연구기관의 성격을 갖되 부차적으로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고등사회과학의 교육은 주로 대학원 박사과정 운영이 될 것이고, 박사 후 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의 연구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로서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에서의 어려움, 즉 외국학위 선호 풍토 때문이고, 직업적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련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장학금 지원은 거의 없고, 국내 대학원에서 체계적인 수련과 조사 방법의 학습, 그리고 최고 수준의 학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등사회과학원 내 대학원 박사과정이 설치되면 장학금과 질 높은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세계적 학자를 교수진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네트워크 방식으로 국내의 관련 학자들이 연구단위로 결합하면, 이들의 연구활동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등사회과학원의 대학원은 석박사 연계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사과정은 응용 사회과학 분야(미디어, 경영, 행정, 법, 사회복지 등)를 제외한 대체로 순수 사회과학에 속하는 분야 중심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문학의 기초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학, 역사, 철학 전공자들 중에서 문화연구, 정책연구, 지역연구 등 연구 기관의 과제로 결합되는 전공자는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박사과정 운영도 기존 대학처럼 학과체제로 운영하기보다는 연구단위 중심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박사과정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영어, 중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재학 중 적어도 1년 이상 반드시 해외 연수를 하도록 지원해서 실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박사후 과정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 3년 정도의 기간에 저서를 집필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지도교수를 선임한 다음, 그의 지도하에 한국어 및 외국어로 저서나 논문을 출판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의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각종 중대형 연구과제에 참여한 박사학위자들은 자기 전공과 무관한 연구단위에 결합한 경우가 많았는데, 고등사회과학원에서는 각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문제의식을 연장할 수 있는 저서와 논문을 일정기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국내 학위자도 해외 대학의 박사후 과정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하지만, 해외 박사가 국내에서 현장성을 가다듬을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고등사회과학원의 박사과정 운영은 국내에서 우수한 사회과학 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과 일부 지방 국립대학의 사회과학 학과나 연구소가 연구 중심 대학, 대학원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sup>53)</sup> 이들 상위권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 집단이 필요하고, 고등사회과학원이 설립되면 매우 중요한 경쟁상대 그리고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지방의 거점대학 대학원도 주요 연구 분야별로 관련 전공 교수들을

---

53) “기존의 조직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Raewyn Connell, “Periphery and Metropole in the History of Sociology”, *Sociologisk Forskning*, Vol.47, No.1(2010), pp. 72-86.

결집시키고 대학원도 특화하여야 한다. 서울의 사립대학 중에서도 사회과학계 대학원 대학을 지향할 경우, 학부 정원 폐지, 컨소시엄 구성, 대학원 전담 교수 배치를 전제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 국립대학의 거점 대학원 대학은 교수와 학생 교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고등사회과학원과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교수의 교류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도 여러 대학 교수들이 함께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에서부터 학자를 지향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 훈련 과정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처럼 해외 지역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국내에서의 과정 이수, 외국에서의 2년 정도의 연수 등을 거의 필수화하고, 학위 수여자들이 학위 수요 이후 최소한의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박사 후 학술연구 교수 T.O도 늘이고 지원액수도 높여야 한다.

고등사회과학원이 한국적 문제의식과 이론적 훈련으로 무장한 우수한 박사들을 배출하여 이들이 장차 대학과 정책연구소, 정부 등에 진출해서 활동할 경우,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대학원의 질 제고는 학문과 지식의 종속 구조의 탈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학문의 길을 택하려는 청년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유학도 막고 막대한 유학비 유출 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등사회과학원에는 재충전과 재교육을 원하는 기업, 정부, 법조계에 인사들을 특별연구원 형태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들은 박사과정 강의를 수강하거나, 별도의 연구 과제를 설정해서 1,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발표하게 한다. 전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업무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나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준비 '학원'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이 별도의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 사회부처 관료들도 단지 승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시 사회, 정치, 복지 등의 사안에 대해 좀 더 넓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의 대중화, 혹은 민간 전문가, 연구자, 시민들과의

교를 위해 프랑스의 콜라주 드 프랑스(Collage de France)와 같은 석학 강의를 매학기 몇 개씩 개설할 수도 있고, 도심 지역의 공간을 빌어서 강연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 V. 맺음말

지난 개발 독재 시기에 교육은 국가안보나 경제발전 등의 목표에 종속되었고, 국가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학문 축적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폭증하는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학의 증설에만 신경을 썼지, 학문 발전을 대학정책과 별개로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수립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관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당장의 경제적 효과에 거들 수 있는 ‘인적 자원’ 양성에 초점을 주었고, 대체로 교육 연구활동은 기업의 요구에 부흥하게 되었다. 2016-2017 촛불 시위에서 제기된 민주화의 질적 제고의 시대적 요청,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화해, 한국전쟁 종전,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요청은 지금의 한국사회가 부딪친 큰 지적 도전이고, 그러한 도전에 맞서는 지적인 응답이 필요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지원 사업을 펼쳤으나 한국의 상위권 대학 중 실질적인 대학원 대학,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한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나 민간 연구소 등 연구단위는 큰 국가적,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가진 청년들은 과거와 다름없이 유학의 길을 택하고, 유학의 경력은 국내에서 교수자리를 얻는 자격증 확보에 주로 사용되었지 한국 사회과학의 세계화와 질적인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교수 채용에서 학연주의, 동종교배, 그리고 유학과 남성위주 채용 관행도 극복해야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고등사회과학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등사회학원은 국가 연구기관이자 대학원 대학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책 연구소와 달리 별도의 국가 학문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의 연구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자 연구 네트워크 기관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대학원 대학이기도 하다. 고등사회과학원이 한국의 사회과학 관련 대학과 지식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는 없지만, 연구중심 대학 강화를 위한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미 자연과학 분야에는 이미 80년대에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설립되어 많은 나름대로의 연구 재생산 기능을 확보했고,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배출하여 학문적 편식과 폐쇄성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많은 국책연구소가 있으나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기존의 상위권 대학의 사회과학 대학원만이 유일한 교육기관이나 미국 명문 대학에 박사과정을 보내는 '석사 양성 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박사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새 대학원이 필요하다.

근대 이후 모든 혁명과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는 언제나 새로운 학문, 새로운 교육체계, 그리고 새로운 대학이 만들어졌다. 프랑스 혁명은 소르본느와 그랑제콜을 만들어냈고,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종합대학이 설립되었고, 중국의 신해혁명은 북경대학을 만들어냈으며,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68혁명은 13개의 공립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만들어냈다. 대학의 역사는 근대화 국민국가의 수립,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 양성과 맞물려 있었다. 식민지, 분단을 겪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새 국가 건설과 수반된 학술 연구기관 건설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는데,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과 장차 통일 국가의 건설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다. 한국의 국가가 한 단계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학문정책의 정립이 필요하고, 새로운 연구 교육기관, 기존의 대학 연구소와 대학원에 큰 자극을 주어 지식세계를 일신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2004.
- 김종영,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2014.
- 에밀, 뒤르캠, 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 소스타인 베블렌, 『미국의 고등교육』. 도서출판 길, 2014.
- 유길준, 채훈 역주, 『서유견문』. 명문당, 2002.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NESCO World Social Science Report 연구분석」. 2011.
- 임현진, 『21세기 한국 사회의 안과 밖: 세계체제에서 시민사회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이브 드잘레이, 브라이언트 가스, 김성현 역, 『공정전투의 국제화: 국가권력을 둘러싼 엘리트들의 경쟁과 지식 네트워크』. 그린비, 2007.

Boabentura de Sausa Santos, “The University in the 21th century: Toward the democratic and Emancipatory University Reform”, Michael Apple et al eds, *Routled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10.

Gutiérrez, Encarnación, Rodríguez, Manuela Boatca, and Sérgio Costa, eds, *Decolonizing European Sociology :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Burlington: Ashgate, 2010.

Unesco,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World Social Science Report: Knowledge Divides*, 2010.

### 2. 논문

- 김성수, 「한국 대학원 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BK 21, WCU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2호, 2013, 53-79쪽.
- 김세균,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 『사회비평 21』, 1999, 140-150쪽.
- 문승익, 「자아 준거적 정치학: 그 모색을 위한 제안」. 『국제정치논총』 13·14, 1974, 111-118쪽.
- 원용진, 「2단계 BK 21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문화과학』 46호, 2006, 262-273쪽.
- 임혁백, 「위기의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과학의 위기」. 『아세아연구』 52(4), 2009, 110-129쪽.
- 정승현, 「현대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담론」. 강정인 엮음, 『정치학의 정체성: 한국 정치학의 주체성을 위하여』, 책세상, 2013, 263-297쪽.

정영근, 「고등교육 시장화 시대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 2016, 101-122쪽.

정영태, 「한국 정치학의 미국 편향성과 한국 정치」. 학술단체협의회 편,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올아카데미, 2003, 137-157쪽.

정일준,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만들기’: 1950, 60년대 미공보원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올아카데미, 2003, 21-50쪽.

조상식,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과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정책」. 한국대학학회 편,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명출판, 2017, 37-48쪽.

조홍식,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의 역사사회학: 시앙스포(Sciences Po)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2권 3호, 2014, 133-157쪽.

최장집, 「한국 사회과학 발전에 관한 하나의 숙고: 학문레짐의 자율성과 학문자유를 향하여」. 『황해문화』, 2017, 236-256쪽.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계열 학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1998.

황성모, 「사회과학의 토착화에 대하여」. 『한국사회과학방법론』, 민음사, 1982, 238-244쪽.

Connell, Raewyn, “Periphery and Metropole in the History of Sociology”, *Sociologisk Forskning*, Vol.47, No.1, 2010, pp. 72-86.

Middleton, Chris, “Models of State and Market in the ‘Modernization’ of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1, No.4, 2000, pp. 537-554.

Mukherjee, Aditya, “Challenges to the Social Sciences in the 21st Century Some Perspectives from the South”, *Economic & Political Weekly*, vol.48, No.37, 2013, pp. 31-37.

### 3. 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중국사회과학원>.

[https://en.wikipedia.org/wiki/Chinese\\_Academy\\_of\\_Social\\_Sciences](https://en.wikipedia.org/wiki/Chinese_Academy_of_Social_Sciences)

[https://en.wikipedia.org/wiki/School\\_for\\_Advanced\\_Studies\\_in\\_the\\_Social\\_Sciences](https://en.wikipedia.org/wiki/School_for_Advanced_Studies_in_the_Social_Sciences)

### 4. 기사

한홍렬, 「변방이 더 교조적’ 떠올리게 한 한국 경제학자들」. 《한겨레신문》, 2018년 2월 14일자.

## 국 문 초 록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된 사회과학의 탈식민화, 정체성 수립, 주체화의 요구를 학자 개인들의 각성과 의지에 맡길 수도 없고, 정부의 사회과학 연구지원 예산의 증대와 지원 방식의 변경 등에 기댈 수도 없으며, 국내 대학원의 활성화와 국내 박사들의 우대 정책 실시 등의 대안이 실현되기를 타성적으로 촉구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학자 개인의 의지, 정책 변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한국의 대학, 특히 사회과학 대학원 박사과정의 반신불수 상태를 주목해야 하고, 이 제도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사회과학 연구의 질적인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기존의 한국 대학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학문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연구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다. 고등사회과학원이 한국의 대학과 학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는 없지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자극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8. 7. 2.

**심사일** 2018. 7. 12.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사회과학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of social sciences),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 학문후속세대 양성(Cultivation of next generations in academics), 학술정책(Academic policy), 고등사회과학원(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ocial Sciences)

## Abstracts

Necessities for Establishing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ocial Sciences’ and Tentative Design for Managing it  
**Kim, Dong-choon**

The long-debated imperatives of decolonization, identity building,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social sciences in Korea cannot be realized simply by urging scholars for incessant dedication and willful determination, or increasing the amount of research funding. Demanding a special treatment for home-grown Ph.Ds in the hiring process of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may not be a viable option available to solve the problems, either.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system, especially, the malfunctioning of graduate courses in prestigious universities must be reformed, and a new institution for research and education should be installed, which may be called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ocial Sciences.” As South Korea is on the verge of building peace with North Korea and designing a new socio-economic system, now is an opportune time to establish the new institute for research and education.